

학력사회, 교육격차 그리고 사회이동: 일본의 경험에서 묻는다.

정준영(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교수)

최근 한국 사회에서 한창 관심을 끄는 이슈 중 하나로 능력주의가 있다. 뻔한 주제처럼 보이지만 파급력은 사뭇 대단하다. 교육학, 사회학, 역사학 등 관련 학계는 물론이고, 각종 언론 매체와 대중문화의 영역에서도 화젯거리로 뜨겁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주의를 단독 주제로 삼은 학술대회가 개최되는가 하면,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한다. 언론 매체에서는 능력주의의 위기를 보여 주는 각종 징후를,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복잡한 반응을 기획 기사로 담아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없는 인문 출판업계조차도 얼마 전부터 능력, 세습, 불평등 등을 키워드로 삼은 기획 저서와 번역서를 쏟아내고 있을 정도다. ‘능력주의와 학력주의’, ‘사회이동과 계층(급) 재생산’ 같은 낯익은 개념 쌍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새로운 토론 거리인 양 열을 올리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물론 능력주의가 이처럼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는 것에는 나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지탱해 왔던 원리 중 하나인 능력주의, 더욱 정확하게는 그 현실태(現實態)인 학력주의(學歷主義)가 위기에 처했고 논란의 대상으로 부상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것이다. 학력주의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능력주의와는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구구한 논의들이 있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생략한다. 독자들은 상세한 논의 중 일부를 이번 호에 준비된 기획논문들 사이에서 읽을 수 있겠다.

다만 여기서는 비가시적인 능력의 차이를 가시화하기 좋은 방법의 하나가 국가나 사회가 보증하는 학교 교육의 이력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학력주의는 현실에서는 사실상 능력주의를 제유(提喻)하는 개념으로 쓸 수 있다는 것 정도만을 확인해 둔다. 요컨대 능력주의는 현실에서는 학력주의였고, 학력의 격차는 곧 능력의 차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런지와는 별개로, 이에 대한 믿음이 능력주의가 현대 한국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회원리 중 하나로 자리 잡는 결정적인 조건이 되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학력 위계는 실력과 노력을 드러내는 정당한 잣대로 상정되었고, 학력주의는 사회이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다리’로서 신뢰되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학력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숨은 열쇠이기도 했다.

2.

그리고 최근 이슈가 흥미로운 지점도 바로 이 신뢰와 관련된다. 즉 한국에서 학력주의(와 능력주의)를 지탱해 왔던 이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학력주의와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도 나름 주효했다. 학력주의가 능력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꽤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쟁점이다. 학력 경쟁이 재능과 노력에 의한 사회이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도 마찬가지다. 이들에 따르면 학력주의란 도리어 부모 세대가 자신의 계급/계층 지위와 경제 자산을 자식 세대에게 대물림하려는 요량으로 추진된 계급 재생산전략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비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한국에서 학력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굳건했다. 학력주의 덕분에 현실의 차별에 대한 불만은 재능 결핍과 노력 부족에서 기인한 자업자득(自業自得)으로 둔갑했고,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라는 방식으로 갈등 해소는 미래로 계속 유예되었다. 대물림의 수단인지를 따지기도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 학력주의는 이미 단단한 체제수호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

그런데 학력주의를 지탱했던 믿음들은 중산층의 붕괴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일본의 “일억총중류”(一億總中流)와 비슷하게 199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중산층의 시대’를 구가했지만 좋은 시절은 오

래가지 않았다. 게다가 이들은 학력주의의 최대 수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균열과 몰락은 학력주의의 성격 변화로 이어졌다. 학력 경쟁으로 입신(入身)에 성공했던 이들은 이번에는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자녀들의 학력 경쟁에 뛰어들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경쟁이었고 학력 위계에 따른 차별은 대물림의 대가로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었다. 한때 신분 질서를 타파하는데 필요했던 근대적 이념은 어느덧 기득권을 수호하는 ‘승자독식’(勝者獨食)을 추진하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 논의는 학력주의를 둘러싼 특유의 아우라를 걷어냄으로써 다양한 연구 질문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능력주의와 학력주의 사이의 길항(拮抗)에 주목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능력주의와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 학력주의의 역할이 시야에 확보된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인력양성, 사회 차원에서 자원배분, 개인 차원에서 동기부여 등 다양한 기능이 얹히면서 학력 위계는 교육의 좁은 경계를 넘어 사회를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원리가 된다. 게다가 학력주의가 사회의 개방성에 어떤 이바지를 했는가의 질문도 실증의 과제로서 부상한다. 과연 한국 사회는 지난 20년간 사회적 상승이동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가? 사회 전체의 구조변화에 따른 사회이동의 추세를 통제해 놓고 본다면, 정말 한국 사회는 상대적인 차원에서도 개방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최근 사회과학자들이 중심이 되는 불평등과 사회이동에 관한 실증적 분석들은 이런 질문들에 타당성을 더하고 있다.

3.

하지만 이런 가능성만큼이나 아쉬움이 남는 것이 현재의 능력주의 논의라고 해야 하겠다. 학력주의에 대한 비판적 접근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능력주의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역사적 분석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논의가 ‘공정’ 담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최근의 논의에서 학력주의의 폐해가 문제로 부상하고, 학력주의와 능력주의의 길항이 구체적인 분석의 대상

으로 확보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공정 담론이 학력주의의 자리를 대체한다. 결국 나쁜 학력주의는 불공정이 문제였고, 좋은 공정은 좋은 능력주의를 보장한다는 관점이다. 한때 학력주의와 한 몸이었던 ‘공정’의 원리는 학력주의에서 분리되고 추상화되어 이제는 능력주의의 실현조건으로 격상된다. 그리고 이 공정의 원리는 사회의 여러 영역에 확대 적용되어 ‘승자독식’의 공정경쟁을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능력주의는 여전히 ‘불가침’(不可侵)으로 남게 되고, 논의는 도돌이표처럼 원래의 궤적을 맴돌고 만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와 주변 사회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이런 경험에 이론적 설명을 추구했던 다양한 학자적 시도를 가볍게 여겨 왔던 것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할 수 있을 것 같다. 능력주의나 학력주의 같은 문제는 반복해서 대중들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지만, 그렇다 보니 우리 학계가 그때그때의 이슈에 휩쓸려서 현장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집적, 해석의 축적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매번 원점에서 출발하기 마련이고 예전에 정리되었던 것들인데도 처음 다루는 양 수고로움을 반복하기 마련인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관련 자료의 축적을 모색하고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해 논의의 연속을 검토할 일이다.

그리고 이런 장기적인 과제의 설정과는 별도로, 지금 시점에서도 참조가 될 만한 역사적 경험, 이론적 해석의 시도를 확보하는 우회로가 필요하다. 이웃 나라 일본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이론적 모색의 시도를 새삼 주목하는 것도 이 지점에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 사회질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능력주의가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 학교 교육을 받은 기간과 수준에 따라 직업적 지위를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는 학력주의가 발전했고, 이것이 능력주의를 사실상 대체하면서 사회의 조직과 분배에서 기축(基軸)으로 자리 잡게 된 것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역사적 동형성의 근저에는 한국이 근대화 초기에 일본에 ‘병탄’되어 식민 통치를 받았다는 아픈 과

거가 경로 의존적으로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은 점차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근대적인 사회 조직의 원리로 능력주의와 그 현실태인 학력주의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했다. 그렇기에 일본의 역사적 경험은 지금 한국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확실히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의 지식인들은 이미 1960년대 무렵부터 학력주의의 문제점, 학력과 능력 사이의 모순, 교육격차가 미치는 파장 등 학력주의와 능력주의, 그리고 공정사회의 문제들을 당면한 사회 과제로 설정하고 있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시도했으며 해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었다. 1960년대 등장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던 학력사회론(學歷社會論), 학력사회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했던 격차사회론(格差社會論) 등은 교육격차에서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이유를 찾고 나름의 논리적 설명을 시도한 것들이다. 계층만큼이나 ‘학력’에 주안점을 둔 일본 학계의 이론적 전통은 서구의 계층/계급이론과 상당히 차별화된 접근으로 비슷한 특징을 가진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물론, 일본 학계에서도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낡은 이론으로 치부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여전히 학력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담지하고 있고 격차가 심각한 사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 논의는 분석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가질 만하다.

이번 기획은 이처럼 최근 한국에서 화제가 되는 상황, 논란이 분분한 쟁점을 이해하는 참조점으로서 일본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이런 경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의 시도를 묻고자 한다. 이번 기획에 수록된 7편의 글은 각자 나름의 관점에 일본 사회가 학력사회와 격차사회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검토한 시도다. 사회학자, 역사학자, 문학사 연구자 등 다양한 학계의 연구자가 참여한 만큼 접근 방식도 다양하고 다루는 시대와 대상도 제각각이다. 애당초 이 7편의 글로써 일본 학력주의의 역사, 교육격차의 쟁점을 전반적으로 훑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고, 이 기획의 취지 또한 거기에 있지 않았다.

4.

이제 이 기획에 수록된 각 연구를 개괄한다. 기본적으로는 필자 각자가 나름의 의식을 개진한 것이지만, 능력주의, 교육격차, 학력 위계 등의 주제가 겹치는 만큼 같이 묶어 읽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분명한 글들은 있는 듯하다.

먼저, 최자명은 전전(戰前)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에 주목하여, 고등교육의 확대가 교육의 민주화를 가지고 오기는커녕 도리어 학력의 위계를 획정하고 강화해 버리는 역설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학교들 사이에 격의 차이가 생겨나고 졸업자 사이에도 대우를 달리하는 것, 그 자체가 학력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필자는 이것을 국가가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는 제국대학과 선택받은 엘리트 학교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교 위계를 설정하였는데 이를 모델로 삼아 각 학교의 '승격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동기부여 속에서 전체적인 교육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고등교육이 끊임없이 확대되는 와중에도 학교 격차가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극심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입학생이 줄어서 학생 수급이 어려운 대학들이 잔뜩 있어도 왜 대학서열은 완화되지 않고 도리어 강화되는지에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논의라 하겠다.

그런데 학력 위계의 형성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설계자가 국가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전전 시기를 통틀어 학교와 직업의 위계가 확대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가가 당긴 학력 위계라는 방아쇠를 대학 당국, 학생들, 산업계, 사회적 여론 등 관련된 행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또 자기 것으로 전유(專有)하고자 했는지에도 관심이 기울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시도가 조정우의 글이다. 그는 인재를 배출하는 학교 쪽이 아니라, 학교 쪽이 배출한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 쪽에 주목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의미하는 바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이른바 일본 기업의 인재 채용의 역사라고 하겠는데, 학교 측의 기대와는 달리 학력 위계로 간단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실제 이윤 창출과 직결되는 인사정책의 고심을 읽을 수 있어서 흥미로운 글이다.

더욱이 조정우의 글은 학교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에서는 좀

처럼 포착되기 어려운 학력주의와 능력주의의 다른 쓸모에 대해서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인재의 잠재능력에 대한 선행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는 ‘학력=능력’이 그 인재가 실제로 거둔 사후적인 실적,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실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의 졸업장이란 지원자의 기대와는 달리 기업의 현장에서는 그저 채용실패의 리스크(risk)를 최소화하는 관료주의적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조정우는 능력주의의 허구성을 간파하면서도 도리어 이를 이용하여 인사 채용의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기업계의 간지(奸智, cunning)에 관련해서도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5.

앞의 두 글이 주로 능력주의와 학력주의의 문제를 상호작용하며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한다고 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양측에서 살펴보고 있다면, 다음의 세 글은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 격차사회가 등장하는 경위와 특징, 그리고 2020년대 격차사회 일본의 현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같이 묶어 볼 수 있겠다. 김지영은 1970~1980년대 학력사회 문제를 거쳐 90년대 중류사회가 키워드였던 일본 사회가 2000년대 들어 왜 격차문제를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가시화하게 되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그의 논의는 한때 한국 학계에서도 소개되어 관심을 받았던 ‘격차사회론’이 어떤 정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출현했는지를 묻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김지영에 따르면 학력사회의 골간을 이루었던 일본식 경영시스템이 이미 1990년대 말부터 붕괴하고 있었다는 점, ‘희망격차’ 논의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격차가 이미 경제적 차이 이상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점 등이 주효했다. ‘학력’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수준의 격차가 어떻게 일본인들의 사회이동, 계급/계층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사회과학적인 분석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한편 최가영은 2000년대 전후 일본 사회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른바 학력 저하 논쟁에서 힌트를 얻어 ‘유토리교육’ 이후 일본의 중등교육 개

력이 과연 기대했던 학력(學力), 즉 학습 능력의 신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필자가 활용하는 자료는 2000년부터 시작된 학습도달도조사(PISA)인데 이를 통해 두 가지 지점에 관한 확인을 시도한다. 먼저, 학력 저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 정책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차원에서 학교 내의 성취도 차이보다는 학교 간의 성취도 차이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업성적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학교가 출현했으며, 학교들 사이의 서열화 경향이 다시금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둘째, 학력저하 논쟁 이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상승은 현저하게 나타났지만, 학생들의 성취도에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친 영향이 커졌고, 특히 높은 서열의 학교에서 현저하게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유토리교육은 학력저하 논란을 낳았지만, 이후 다양화 정책들은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이것을 다시금 위계화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하시모토 겐지는 2020년대 일본 격차사회의 현재를 기존의 계급사회의 구도에서도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 계급, 다시 말해 언더클래스의 등장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하시모토에 따르면 이 언더클래스는 “노동자 계급이면서도 노동력의 가치를 크게 밑도는 임금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최하층 노동자”를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광범위한 저변을 구축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층과 대응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필자가 SSM조사 등을 활용해서 이들 언더클래스의 특징과 내부 구성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세한 내용은 글에서 확인할 바이지만, 같은 언더클래스라고 해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상당히 분절적으로 분포하면서 다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도 다른 계급집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격성과 급진성을 보인다는 대목도 주목되는데 기존의 정당구조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결과와 구 중간계급과 더불어 이들의 의견이 상당히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지적도 생각해 볼 만하다. 그렇다면 이들 언더클래스의 과소대표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계급도 염두에 두면서 주목해 볼 만하다.

6.

남상욱의 글은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된 2000년대 이후 현대일본에서 ‘학력 사회’가 문학 및 만화 등 문화 미디어에서 어떻게 표상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따지고 있다. 우리의 기획으로 본다면 학력사회와 격차사회가 교차하는 현시점에서 ‘학력사회’의 표상을 추적하는 흥미로운 작업이다. 남상욱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앞서 최자명과 조정우가 드러냈던 간극, 다시 말해 학력과 능력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학원가와 취업시장 사이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지점들이었다. 남상욱이 분석하는 문화 미디어는 바로 이 지점의 균열을 여지 없이 드러낸다. 만화 <드래곤 사쿠라>는 1970~1980년대의 학력사회를 방불케 하는 성공 신화를 그려내지만, 그 장소가 방금 전까지도 ‘교실 붕괴’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최가영이 보여 주었던 학력저하 논쟁이 그 배경이 된다. 그러므로 이 만화는 학력에 ‘올인’하는 것 같지만 도쿄대의 합격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경쟁의 현실을 드러낸다. 이것은 히메노 가우로코의 『그 여자애는 머리가 나쁘니까』 속의 주인공들, 외설 사건을 일으킨 도쿄대 남학생들의 기묘한 편차치 집착으로 계속된다. 현실의 세계에서 갈수록 학력의 징표들은 무력해지지만, 오히려 그러므로 학력의 소유자들은 집요하게 기득권에 집착하며 하위클래스들을, 언더클래스들을 배제한다.

마무리에 해당하는 정인관의 글은 한일 비교의 관점에서 일본의 교육격차와 사회이동이 가지는 특징을 개괄한다. 글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사회이동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려는 시도는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의 교육격차와 사회이동을 검토하고 있는 연구들을 개괄적으로 훑으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련 학계가 공통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제시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기획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현재의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지적 단서로서 일본 사회의 경험, 일본 지식인들의 이론적 시도를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의 공유였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비교하여 장단을 가리겠다는 야심과는 관계가 없으며, 두 사회 사이에 오랜 시간

뒤얽힌 복잡한 관계와 그 내막을 드러내기에도 부족함이 많다. 차라리 이것은 일본의 연구 경험을 어떻게 한일 양 국가의 연구자가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자신의 연구성과로 축적해 갈 것인가를 묻는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정인관이 제기하는 질문과도 일맥상통한다. 마지막으로 부족하지만, 이 기획이 한국학과 일본학이 지적으로 소통하는 자그마한 시도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